

신탁관리청의 활동과 구동독 경제의 변화

김길웅 외*

1. 신탁관리청의 설립

1.1. 설립목적

동독이 해체의 길을 걷고 동서독간의 통일이 임박한 무렵, 당시 동독의 모드로 Hans Modrow 정부와 당사자들은 향후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국유화된 재산들이 동독 노동자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¹⁾ 즉 國有企業 Volkseigener Betrieb이나 콤비나트 Kombinat가 주인 없는 재산이 되지 않아야 하고, 또 국유기업의 기존 관리자들이 그 기업의 사실상의 소유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독 정부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결의했던 것이다.²⁾ 그리하여 <信託管理廳>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신탁관리청은 국유기업을 有限會社 GmbH나 株式會社 Aktiengesellschaft로 개편할 경우 발생할 持分을 확보하는 목적을 띠고 만들어졌다.

1.2. 설립까지의 과정

1990년 3월 1일 동독의 각료회의는 <국유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관청 Anstalt zur treuhänderischen Verwaltung des Volkseigentums>의 설립을 결의했다. 그리고 두 주 후인 3월 15일 이 관청은 활동을 개시했다.³⁾ 3월 18

* 독일학연구소 독일 통일 관련 집담회 경제분과 (팀장: 홍성광, 팀원: 황종민, 심희섭, 김길웅, 이은주, 황승환)

1) Vgl. Rüdiger Liedtke: Zu treuen Händen-Volkswirtschaft im Angebot, eine Einführung ins Thema, in: ders. (Hrsg.): *Die Treuhand und die zweite Enteignung der Ostdeutschen*, München 1993, S. 19.

2) Vgl. Jörg Roesler: Die Treuhandanstalt, die Geschichte der Treuhand und die ökonomische Transformation der ehemaligen DDR-Wirtschaft, in: R. Liedtke(Hrsg.): *Die Treuhand und die zweite Enteignung der Ostdeutschen*, a.a.O., S. 20 f.

3) Vgl. *Gesetzblatt(GBl) der DDR 1990*, Teil 1, Nr. 14.

일 동독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관청의 설립이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신탁관리청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체제 붕괴가 임박하면서 동독 정부는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다. 개혁의 방향은 시장경제의 도입 쪽으로 잡혀갔다. 문제는 시장경제의 도입의 속도와 범위였을 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1990년 2월 초 동독 각료회의는 새로운 경제개혁강령을 승인한다. 이 강령은 <원탁회의의 Runder Tisch>가 주도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그 골격은 “국가 통제의 틀이라는 조건 내에서의 사회·생태 지향의 시장경제”를 이룬다는 데에 있다.⁴⁾ 이 개혁구상은 중앙 집중적인 계획경제를 점진적이면서도 철저하게 해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중심점은 ‘점진적인 개혁’에 놓여 있다. 그리고 ‘국가 통제의 틀’을 인정하고 있다. 모드로 정부의 개혁안은 아직까지 서독 식의 자유 시장 경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드로 정부는 국유화를 부분적으로 철폐하려고 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公有財産 das gesellschaftliche Gemeineigentum”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① 일정 분야에서는 국유재산이나 자치단체 소유의 기업을 인정하고, ② 종업원들이 좋은 조건으로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③ 또 필요한 경우 경영권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은 公有로 남겨두는 방식(이하 경영매각 Management-buy-out)이 모드로 정부가 구상했던 사회적 공유재산의 구체적 형태가 될 수 있다.⁵⁾ 모드로 정부는 동시에 재산의 사적 소유도 가능케 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1972년에 국유화했던 기업들을 다시 사유화하는 작업도 병행했으며, 외국과의 合作企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한 달 뒤인 1990년 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모드로

4) Regierungskonzepte zur Wirtschaftsreform in der DDR. Zielstellung, Grundrichtungen, Etappen und unmittelbare Maßnahmen der Wirtschaftsreform in weiterer Verwirklichung der Regierungserklärung vom 17. 11. 1989, hrsg. von der Arbeitsgruppe Wirtschaftsreform beim Ministerrat der DDR, Berlin 1990, S. 1, zit. nach: J. Roesch: a.a.O., S. 20: eine sozial und ökologisch orientierte Marktwirtschaft bei staatlich regulierten Rahmenbedingungen.

5) Regierungskonzepte, S. 5, zit. nach: J. Roesch: a.a.O., S. 21.

의 실각으로 인해 폐기된다. 3월 18일 총선 결과 드 메지에르 de Maizière가 이끄는 <독일을 위한 聯盟 Allianz für Deutschland>이 집권하게 된다. 드 메지에르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그 첫 작업으로 그는 취임직후 <經濟, 通貨, 社會統合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이하 통화통합)을 이룰 시기에 대해 서독과의견일치를 보았다.⁶⁾ 새 정부는 원래 1993년 1월 1일로 잡혀있던 시장경제의 전면적인 도입시기를 1990년 7월 1일로 앞당겼고, 또 모드로가 추구했던 경제체제보다 훨씬 급진적인, 서독 식의 완전한 “사회적 시장경제 Soziale Marktwirtschaft”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독 경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노선이 있었다. 하나는 동독 경제의 회생을 최종 목표로 삼고 부분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인정하면서 동독 경제를 회생시키자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은 서독 식의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국유기업을 완전 사유화하자는 쪽이다. 전자는 모드로 정부의 개혁안이고, 후자는 드 메지에르 정부의 그것이다. 원래 신탁관리청의 설립을 주도했던 모드로 정부의 구상에 따른다면, 신탁관리청의 활동의 주안점은 국유기업의 관리에 있었다. 즉 위기에 처한 동독 기업의 구조를 합리화하여 경쟁력을 회복시키 일이 신탁관리청의 일차적 활동 목표였다. 그러니까 원래 신탁관리청은, “경제를 이끌어 가는 行政組織이 아니라 國有財産의 管理者”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⁷⁾

2. 신탁관리청의 조직과 규모

2.1. 조직

신탁관리청은 1990년 말경에 최종적인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 기구의 최상부는 감독위원회 Aufsichtsgremium와 지도위원회 Leitungsgremium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위원회의 기능은 23명으로 구성된 관리협의회 Verwaltungsrat가 담당했는데, 관리협의회 구성원들의 신분은 새로 연방에

6) Vgl. Lothar de Maizière: Regierungserklärung, in: *Neues Deutschland*, 20. 4. 1991.

7) *Neues Deutschland*, 2. 3. 1990, zit. nach: J. Roesch: a.a.O., S. 21: als Verwalter des Volkseigentums, aber nicht als wirtschaftsleitendes administratives Organ.

편입된 주(州)의 수상들,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및 은행 총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위원회 의장이 신탁관리청의 대표직을 맡았다. 초대 대표는 고올케 Rainer Maria Gohlke였고, 이어 로오베더 Detlev Karsten Rohwedder가, 그리고 브로이엘 Brigit Breuel이 뒤를 이었다. 대표를 정점으로 그 하부에는 모두 8명의 이사들이 분야별로 각각의 업무를 관장했다.⁸⁾

신탁관리청의 중앙본부는 베를린에 있었고, 지방에 15 개의 지부를 두었다. 중앙본부는 지부의 자율적인 활동을 최대한 허용했고, 지부의 대표는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외국과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연락 사무소도 열었다. 예를 들면, 1991년에는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⁹⁾

2.2. 규모

이 관청은 출범 당시 약 8천여 개의 기업¹⁰⁾, 약 2만 5천 개의 소매상점, 7천 5백 개의 여관과 호텔, 2천 개의 약국, 나아가서 여행사무소, 독일 자유노조 연맹 FDGB 산하 요양시설과 호텔, 언론 잡지사 및 1백 7십만 헥타의 농지와 임야를 관리했다. 이들 기업과 시설의 자본금 100%를 신탁관리청이 가지고 있어서, 신탁관리청은 <持株會社 Holding>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신탁관리청 산하 직원은 4백만 명에 달했다. 따라서 신탁관리청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國營企業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지주회사였던 것이다. 신탁관리청에 소속된 기업과 직원 수는 미국의 上場企業 가운데 상위 25 개 회사를 합쳐 놓은 것과 맞먹는다.¹¹⁾

8) Vgl.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 a. M./ New York 1996, S. 664 f.

9) Vgl. ebd., S. 665.

10) 그 가운데에는 1천 5백 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의 수만도 2천 개가 넘는다.

11) Vgl. J. Roesler: a.a.O., 1993, S. 19.

3. 신탁관리청의 활동

3.1. 활동방향의 변화

1990년 7월 1일 통화통합 조약이 발효된다. 이 조약에 첨부된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다.

직간접적으로 국유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 되도록 빨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구조가 재편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폭넓게 사유재산으로 변모되어야 한다.¹²⁾

이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화통합 조약은 국유기업의 처리 방향을 ①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②사유화라는 두 가지의 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서독의 재무장관 바이젤은 후자를 절대적으로 중시하여, 동독 경제를 사유화시키는 데 신탁관리청을 이용하려고 한다. 바이젤의 입장은 동독 정부와 인민회의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 6월 중순 동독의 인민회의는 동독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탁관리청의 조직개편을 결의한다. 법령의 형태를 띤 이 결의내용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유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¹³⁾ 여기서 신탁관리청의 활동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탁관리청의 제1의 목적, 즉 우선 순위는 동독의 국유기업의 관리가 아니라 국유기업의 사유화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래 신탁관리청이 갖고 있던 구상, 즉 소유형태를 다양화하여 공유재산을 일부 인정하는 일은 불가능해지고

12) Vertrag fü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r Staatsvertrag, Grundlage der deutschen Einheit, hrsg. vom Ministerium für Medienpolitik, Berlin, und dem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990, S. 11-31, hier: S. 12, zit. nach: J. Roesler: a.a.O., S. 25: Unternehmen im unmittelbaren oder mittelbaren(!) Staatseigentum [...] sind so rasch wie möglich wettbewerblich zu strukturieren und so weit wie möglich in Privateigentum zu überführen.

13) Information über die Gesetzgebungsarbeit zu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 Stand 18. 7. 1990 -, hrsg. vom Ministerium für Wirtschaft der DDR, Berlin 1990, S. 3, zit. nach: J. Roesler: a.a.O., S. 26: Das Gesetz hat zum Ziel, die unternehmerische Tätigkeit durch Privatisierung zu fördern.

만다.

신탁관리청은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으면서 활동방향이 변한다. 그것은 국유 재산을 부당한 자들의 침탈로부터 보호하고 국유 재산의 구조를 변화시켜 이를 부분적으로 양도하는 작업을 관장할 국영 감독관청 staatliche Aufsichtsbehörde에서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국가차원의 매각기구로의 변화를 말한다.¹⁴⁾ 드 메지에르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서독의 전문가들을 초빙, 신탁관리청의 상층부에 포진시켰다. 예를 들면 신탁관리청의 관리협의회 (명예)의장은 회쉴 주식회사 Hoesch AG.의 이사장인 로오베더가 맡게 되었고, 신탁관리청의 대표는 독일 연방철도의 이사장인 고울케가 맡았다.

3.2. 신탁관리청의 활동

신탁관리청은 법에 기초한 연방 직속 기관으로, 1994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기로 되어 있었다.¹⁵⁾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기관의 활동목표는 “과거 국유 기업의 구조를 재편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과 사유화하는 일”이었다.¹⁶⁾ 하지만 이 두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은 수많은 갈등에 처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를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2.1. 활동과 관련된 갈등

3.2.1.1 정치와 재정 사이의 갈등

신탁관리청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사유화를 완결지어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문제와, 산하기업들을 사유화할 때 될 수 있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 높은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재정적인 고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 1마르크에라도 매

14) Vgl.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 Treuhandgesetz - , *GBl. der DDR 1990*, Teil 1, Nr. 33.

15) 신탁관리청의 활동 근거가 되는 법으로는 신탁관리법(1990년 6월 17일 동독 인민의 회 결의), 국가조약(1990년 5월 18일) 그리고 동서독간의 통일조약(1990년 8월 20일)을 들 수 있다. Vgl. W. Weidenfeld/ K.-R. Korte(Hrsg.): a.a.O., S. 664.

16) Vgl. ebd., S. 664: frühere volkseigene Betriebe wettbewerbsfähig zu strukturieren und zu privatisieren

각함으로써 조속히 사유화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를 중시한다면 많은 구매자들을 기다렸다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 신탁관리청의 활동방향을 보면, 이런 유형의 갈등이 빚어질 경우 대체로 정치적인 요인을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정치논리에 따라서, 신탁관리청의 (순수)매각이윤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3.2.1.2 서독출신 경영자들이 신탁관리청의 지도부를 차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신탁관리청의 지도부에 포진한 서독출신 인사들의 대부분이 연방공무원이 아니라 서독출신 경영자들이었다. 이들은 신탁관리청에 봉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소속한 기업에 이익도 가져다주어야 했다. 예를 들면 로오베더는 회쉬 주식회사가 휴가를 주어 파견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는 신탁관리청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소속했던 아이 비 엠 IBM과 볼보 Volvo와 알리안츠 Allianz 보험회사 그리고 루르 가스주식회사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가 감사로 재직했던 알리안츠 보험회사가 동독의 국영보험회사를 인수했다던가, 루르 가스 주식회사가 동독의 장거리 가스 운송회사를 합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동독 기업들의 매각을 둘러싼 스캔들, 언론의 여러 추적 보도는 그러한 의혹을 사실로 입증한다.¹⁷⁾

3.2.1.3.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생기는 갈등

통화통합 조약의 <共同議定書 Gemeinsames Protokoll>에는 국유기업을 사유화할 때 중소기업의 기업들에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⁸⁾ 이 조항에 따르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할 경우 중소기업

17) 기업의 매각절차도 체코나 폴란드 헝가리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공정한 공시절차를 걸친 경매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독해라는 의혹이 자주 제기되었다. 관례를 깨고 언론들은 신탁관리기구 내의 커넥션을 자주 보도하기도 했다. Vgl. *Neues Deutschland*, 22. 3. 1991.

18) Vgl. *Der Staatsvertrag, Grundlage der deutschen Einheit*, hrsg. vom Ministerium für Medienpolitik, Berlin, und dem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매입가(買入價)를 낮게 부르게 된다. 따라서 최대의 매각이윤을 남겨야 하는 신탁관리청으로서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향한다는 이념은 “늘 서독 기업에 먼저 다가서려는”¹⁹⁾ 신탁관리청의 처리방향 때문에 희생되고 말았다. 예를 들면 포츠담 소재 <소규모 국영 상점들 HO-Einzelhandelsgeschäfte>은 중소기업의 동독 원매자(願買者)가 아니라 서독의 대자본주들에게 매각되었다. 매각 당시 사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수는 천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허수아비였고, 포츠담의 원매자들 뒤에는 거의 언제나 자본력이 탄탄한 서독 출신의 구매 희망자가 있었다.”²⁰⁾

3.2.1.4. 기업매각시 서독 기업들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통화통합조약에 서명하면서 연방 재무장관 바이젤은 수사학적인 표현을 구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동독과 서독 그리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는 극도로 유리한 출발기회가 제공되었다.”²¹⁾ 그러나 이 세 지역의 투자자들이 모두 똑같은 재정수단과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신탁관리청과 맺은 관계도 서로 달랐다. 동독이나 외국 기업보다는 서독 기업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기업 매각시 서독 기업들은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3.2.1.5. 매각을 절대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

신탁관리청의 과제는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를 떼어 매각하는 것이었다. 매각을 하면서, 기업의 지리적인 특성, 지역에서 기업의 역할, 매입회사와

Bundesregierung, Bonn 1990, S. 11-31, zit. nach: J. Roesler: a.a.O., S. 33.

19) *Berliner Zeitung*, 12. 4. 1991, zit. nach: J. Roesch: a.a.O., S. 31.

20) Manfred Lemaire: Treuhandanstalt: das lange dünne Ende kommt noch, in: *Wochenpost* 38, 1991, S. 25, zit. nach: J. Roesch: a.a.O., S. 31: Nur-leider viele waren Strohmänner, hinter fast jedem Potsdamer Bewerber stand ein finanzkräftiger Interessent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21) Der Staatsvertrag, a.a.O., S. 87, zit. nach: J. Roesler: a.a.O., S. 31: Für Investoren aus der DDR, der Bundesrepublik und aus der ganzen Welt werden mit der Errichtung d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außerordentlich günstige Startchancen geschaffen.

매각될 기업 사이의 분업적인 관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즉 매각이 기계적으로 행해졌다. 매각될 기업이 갖고 있었던 특성이나 하청기업들과의 연결고리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구동독의 국유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원칙 없이 분할하여 원매자들에게 매각되고 말았던 것이다.

3.3. 활동의 결과

통계에 따르면, 1994년 12월 31일까지 신탁관리청은 모두 1만 5천 개의 국유기업들을 양도한 것을 되어 있다. 이처럼 숨막히는 속도로 사유화를 강행한 결과 생긴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화 과정에서 약 68%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신탁관리청이 관장했던 일자리는 약 4백 10만 개에 달했는데, 1992년 말에는 그중 약 1백 30만 개만이 남았다.²²⁾ 약 3백만 명의 구동독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셈인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지향점 상실 현상은 현재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둘째, 동독의 제조업 das verarbeitende Gewerbe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에 3/4이 줄어들어 총 3백 20만 명 가운데 7십 5만 명, 1993년 말에는 70만 명만이 남았다. 이는 산업의 해체로 인한 현상이다.

셋째, 사유화된 기업의 대부분이 파산 직전 상태에서 가동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과 경영매각을 통해 사유화된 기업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넷째, 고용안정과 투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²³⁾

다섯째, 신탁관리청이 매각을 통해 올린 수입이 극도로 낮았다. 로오베더는 1990년 약 6천억 마르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1992년까지

22) Vgl. Jan Prieue: Die Treuhand und die Bonner Politik, die größte Holding der Welt hat sich gründlich verkalkuliert, in: R. Liedtke(Hrsg.): a.a.O., S. 92-105, hier S. 94.

23) 새로 편입된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는 매우 크다. 그러나 1991년도 동독지역 주민 1인당 투자액은 서독의 그것에 비해 50%, 1992년에는 73%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경우 1991년 동독에 투자된 비용은 130억 마르크인데(그 가운데 서독이 투자한 액수는 80억 마르크), 서독에는 96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고, 1992년에는 190억 마르크였다(그 가운데 서독이 투자한 액수는 165억 마르크). 이것은 서독의 87%에 불과했다. Vgl. ebd., S. 103.

실제로 벌어들인 총 수입은 겨우 200억 마르크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겨우 100억 마르크에 그쳤다. 사유화된 기업들 대부분을 약간의 “재정적인 지참금 finanzielle Mitgift”만 받고 무상으로 증여해버린 셈이다.

여섯째, 신탁관리청의 총 부채는 1994년 말까지 2,564억 마르크에 달했다.²⁴⁾ 이것은 1990-94년 사이에 발생한 국가 부채 증가량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995년 이후에는 연방과 각 주들이 갚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1995년 이후 소득세에 대한 추가징수를 입안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재정손실을 초래할 전망이어서 신탁관리청은 간접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²⁵⁾

4. 동독경제의 변화

1990년 7월 1일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동독 경제의 발전 전망에 대해 빌게로트 Hans Willgerodt가 주도한 감정평가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연방공화국과의 자유교역을 위해 국경이 개방되면 지금까지 생산을 저해해왔던 수많은 애로(隘路)들이 제거될 것이다. 물자부족과 납품중단으로 인한 생산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서독으로부터의 모종의 원조나 투자가 유입되기 전이라도 생산의 동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 개혁이 시작되면서 기대했던 생산성의 향상도 매우 높아질 것이고 원가절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²⁶⁾

24) Vlg.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rsg.): a.a.O., S. 666 f.

25) Vgl. ebd., S. 94 f.

26) Hans Willgerodt unter Mitwirkung von Barbara Dluhosch, Malte Krüger, Gutachten: Vorteile der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s, hrsg. v. Institut für Wirtschaftspolitik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1990, S. 71, zit. nach: J. Roesler: a.a.O., S. 33 f.: Nach Öffnung der Grenze für den Freihandel mit der Bundesrepublik werden zahlreiche bisher die Produktion beeinträchtigende Engpässe aufgesprengt, weil es nicht mehr zu Produktionsstörungen wegen fehlenden Materials oder ausgebliebener Zulieferungen kommen kann. Die Motivation zur Leistung wird wiederbelebt werden, sogar bevor irgendeine Hilfe

이처럼 빌게로트는 “시장경제의 대폭발 ein marktwirtschaftlicher Urknall”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동독이 처한 특수한 문제들, 예를 들면 불충분한 생산성이나 不良한 상품품질 등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동독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동독이 시장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취한 몇 가지 예비조치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서독에 대해 동독 경제를 완전히 개방해 놓고 보니, 동독 기업들 - 국유기업은 물론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소수의 사유기업, 혹은 국영에서 민영으로 바뀐 기업 모두 - 에게는 파국과도 같은 결과들이 빚어졌다.

1990년 7월 기준으로 생산은 전달에 비해 약 1/3 (34.9%) 감소했다. 그리고 8월에는 14.6%가 추가로 감소했다.²⁷⁾ 戰時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화시에 동독의 경제가 그토록 심각하게 위축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로써 동독의 산업생산은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볼 때 겨우 절반(50.8%)에 불과하게 되었다.

서독 마르크의 도입은 기술 및 조직상으로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서독의 물가, 통화 및 이자율 수준도 안정세를 보였으며, 동독 국민들의 실질 純所得도 서독 마르크로의 교환 후에도 역시 어느 정도 補填되었지만²⁸⁾, 의도적이건 아니건 서독 마르크가 동독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7월 한 달 동안 이미 총 8천 개의 신탁관리청 산하 기업 가운데 5천 개의 기업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신탁관리청에 총 230억 마르크에 달하는 신용대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²⁹⁾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통화 전환할 때 임금처럼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1:1로, 예금이나 채무와 같은 경우에는 1:2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당시까지 서방시장에서 서독의 1마르크를 얻기 위해서

aus der Bundesrepublik oder ein Kapitalbeitrag zugeflossen ist.[...] Die gerade zu Beginn der Reform zu erwartende Produktivitätssteigerung kann sehr hoch sein und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Betriebe durch Kostensenkung massiv erhöhen.

27) Vgl. J. Roesler: a.a.O., S. 34.

28) Vgl. Christa Luft: *Zwischen Wende und Ende*, Berlin 1991, S. 193.

29) Vgl. *Deutschlandarchiv* 38, 1990, 9, S. 1133.

4.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해야 했던 동독 기업들은 “300-400%에 달하는 극적인 平價(平價)上 結果”³⁰⁾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국유기업들은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괄적인 가치평가절상으로 인해 동독기업들은 서방시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놀랍게도 양 독일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분명히 예측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부정적인 현상은 동독이 소련이나 동구 쪽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할 때도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잘 알려진 대로 고질적인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동독 물건의 구입을 중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독 기업들은 이들 시장도 잃게 되었다.

시장이 개방되어 서독의 물건들이 동독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옴으로써, 동독의 内需市場은 즉각 위축되고 말았다. 적어도 초기의 경우, 동독 국민들은 질 좋고 포장이 멋있으며 개봉하기 편한 서독 상품에 몰려들었다. 또 서독의 체인점인 레베 Rewe, 텅엘만 Tengelmann, 슈퍼 Spar 등은 7월 1일 이후 동독의 국영상점들을 이용하여 판매를 개시했다. 그 결과 레베 Rewe의 경우 구입 물건의 95%를 서독에서 조달했다.³¹⁾

수많은 동독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어 시장도 붕괴되었다.³²⁾ 만일 원래의 계획대로 兩獨 정부가 시장경제의 법칙을 고수하여 사태를 방임했다면, 생산중단으로 인해 약 1백만 명 이상의 산업노동자들이 해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독 정부는 경제적인 파국에 이어 사회적인 파국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9월과 12월에 선거가 임박해 있었던 것이다. 연방정부는 수십 억 마르크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불불능 상태에 빠진 기업들을 회생시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단축조업을 할망정 일단 조업을 가능케 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동독 실업자 수는 7월 한 달 동안 25만 명에 그쳤지만, 이것은 전에 비해 두 배로

30)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3. 4. 1991, zit. nach: J. Roesler: a.a.O., S. 36.

31) Vgl.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6. 3. 1991.

32) 시장붕괴의 양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2년에는 동독에서 소비된 물품의 60%가 서독제품이었다. 또 나머지 40%도 지리상으로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물건과 서비스 업종이 주종을 이루었다. 또 1992년 당시 수입품은 2570억 마르크였는데, 동독에서 만든 물건의 수출은 겨우 720억 마르크에 불과했다. Vgl. J. Roesler: a.a.O., S. 101.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조업단축을 하게 된 노동자들의 수는 70만 명에 달했다.

5. 마무리

신탁관리청은 계획대로 1994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신탁관리청의 업무는 연방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과연 사유화가 동독 산업을 회생시키는 최선의 길이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다. 먼저 동독 지역 기업을 매각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입한 기업의 수는 겨우 860여 개로, 전체 매각 대상 기업의 5% 남짓에 불과했다. 서독의 경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낮은 수치이다. 또 대기업을 해체하고 중소기업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브로이엘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1992년 5월 카르테 Wolfgang Korte는 연방 기업연합청 대표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탁관리청의 실무 처리 방식은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 이러한 실무 처리 방식은 동독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의 탄생을 방해했다.”³³⁾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사유화는 결국 서독 대자본에 일방적인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경제수준의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만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오류는 덮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유화 일변도 노선을 추구한 신탁관리청의 공과에 관한 최종적인 평가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동서 쪽의 경제수준의 차이가 아직도 遠隔하고, 이 격차는 2010년이 되어야 해소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³⁴⁾ 따라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 신탁관리청의 활동은 “사유화를 통한 산업의 해체 Deindustrialsierung durch Privatisierung”라는 표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3) Handelsblatt, 7. 5. 1992, zit. nach: J. Roesler: a.a.O., S. 51: Die Praxis der Treuhandanstalt begünstigt die Großunternehmen [...] Diese Praxis behindert die Herausbildung mittelständischer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34) Vgl.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rsg.) a.a.O., S. 663.

참고문헌

- Humann, Klaus (Hrsg.): *Wir sind das Geld, Wie die Westdeutschen die DDR aufkaufen*, Reinbeck bei Hamburg 1990.
- Liedtke, Rüdiger: *Die Treuhand und die zweite Enteignung der Ostdeutschen*, München 1993.
- Liedtke, Rüdiger: Zu treuen Händen-Volkswirtschaft im Angebot, eine Einführung ins Thema, in: ders. (Hrsg.): *Die Treuhand und die zweite Enteignung der Ostdeutschen*, München 1993.
- Priewe, Jan: Die Treuhand und die Bonner Politik, die größte Holding der Welt hat sich gründlich verkalkuliert, in: Liedtke, Rüdiger (Hrsg.): *Die Treuhand und die zweite Enteignung der Ostdeutschen*, München 1993.
- Roesler, Jörg: Die Treuhandanstalt, die Geschichte der Treuhand und die ökonomische Transformation der ehemaligen DDR-Wirtschaft, in: Liedtke, Rüdiger (Hrsg.): *Die Treuhand und die zweite Enteignung der Ostdeutschen*, München 1993.
- Weidenfeld, Werner/ Korte, Karl-Rudolf(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 a. M./New York 1996.